

## 고하 송진우의 사회관과 경제관

심지연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 현대사에서 古下 宋鎮禹는 교육·언론·문화·정치 등 각 방면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고하는 성장하면서 일제의 수탈과 침략에 의해 조선왕조가 몰락해 가는 과정을 보며 분투(憤淚)를 삼켜야 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어엿한 청·장년으로서 국권을 잃은 조국을 구하기 위해 문화운동에 앞장섰고, 해방 후에는 정부 수립문제를 둘러싸고 혼란한 이념투쟁의 와중에서 민주주의의 구현과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다가 생을 마감한 인물이었다.

해방 후 고하는 비록 4개월여의 짧은 기간밖에는 활동하지 못하고 타계하고 말았지만, 고하가 다진 터전 위에서 한국민주당이 성장했고, 일제강점기에 폐간되었던 동아일보가 속간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들치고 고하와 관련되지 않은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물론 고하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고하의 리더십에 기인한 바 컸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하는 해방 후의 활동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자신의 활동에 관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 못하고 말았다. 일제강점기에 집필한 글들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일제의 패망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정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하가 생전에 남긴 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수주의자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신념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고하의 사회관과 경제관에서 그러한 면모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일제가 민족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조치로 1925년 치안유지법을 공포하자, 치안유지법과 같은 법으로 인해 조선에 정치활동이 없는 것은 일시적인 '변태 현상'이며,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독립을 향한 민족의 의지는 결코 꺾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의 대세가 합리적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민족의 지혜가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 민족은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런 의미에서 고하는 좌우의 합작으로 탄생한 신간회가 계급을

완전히 결집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실한 지도자가 있어야 할 것과 건설한 지도자들의 규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민족의 단결을 강조한 고하는 민족이 분열하게 되면, 아무리 철저하고 훌륭한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마도 이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계급 간의 대립에 대해 비판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계급보다는 민족이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에서였다.

이 같은 입장이었기에 고하는 민족운동을 전개한다는 목표를 갖고 출범한 신간회가 해체되자, 민족주의적 조직체를 사회주의이론으로 해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조선공산당사건이 발생하자, 고하는 공산당의 결성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모순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을 강제적으로 억압할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상대방의 사상을 존중하고 정당한 이론투쟁을 통해 합리적인 진로를 발견해야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는 진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공산당이라는 조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을 실행할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체제를 전복하려는 조직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사상단체로 취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공산주의를 포함해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 것인데, 이를 볼 때 고하가 극우 보수주의자라는 정적들의 비판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고하는 또한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에 의해 피폐해 가는 농촌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농민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지할 곳 없이 가장 불안한 위치에 놓여있으므로, 소작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작인의 지위를 법률 또는 필요한 방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토지수용령 발동도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가렴주구가 계속될 경우 농촌이 피폐해져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므로 지주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농민을 위해 토지수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후일 사회민주주의혁명을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이를 보더라도 고하가 지주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다는 좌파의 비판은 성립하기 어렵다.

고하는 여러 글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평등과 자유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인류의 문화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념에서 나온 것이었다. 즉, 세계의 조류는 자유권 발전시대로부터 생존권 확충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으로만 기회균등을 요구했던 인류가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기회균등이 필요하다고 각성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존권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자유가 아니면, 특정계급의 전횡과 방종을 조장할 뿐이라고 말하고, 완전한 자유는 평등에 있고 평등의 기초는 생존권 보장에 있다고 단언했다. 경제적 자유가 없

는 정치적 자유는 공허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자유와 생존권 보장을 강조한 고하는 해방 후 역사 발전단계를 사회민주주의혁명단계로 파악했다. 고하가 해방 후의 단계를 사회민주주의혁명단계로 규정한 것은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인 박헌영(朴憲永)이 주장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단계론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된다.

고하가 박헌영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비판한 것은 생존권을 얻었지만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러시아 대중의 불평’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조선의 현실은 ‘노동러시아’와는 다르다는 것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박헌영은 지주와 고리대금업자 그리고 반동적 민족자본가는 친일적 태도를 위장하기에 여념이 없으며,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들과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고하와 인촌을 중심으로 한 한국민주당은 ‘지주와 자본계급의 이익을 대표한 반동적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한민당이 ‘반동적 정당’이라는 박헌영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고하가 제시한 것은 사회민주주의혁명이라고 생각되는데, 불행히도 고하는 이 내용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말았다. 정적들의 암살에 의해 일찍 생을 마감하는 바람에, 자신의 이념을 미처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지 사회민주주의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짤막한 구절만을 언급했을 뿐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한민당이 지주와 자본가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는 박헌영의 비판은 성립하기 어렵다.

“혹자는 현단계를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하나, 그것은 일개 공식론에 불과하다. 현 단계는 大이념 하에 수행되는 사회민주주의 혁명단계라고 본다. 토지는 소작권 설정에 의한 국유제로 해야 한다. 토지의 재분배는 몇 십 년 후에 또 다시 토지점병의 폐해를 야기시킬 것이니, 백년지대계가 아닐 것이다. 철도·선박·전신, 특히 의식주에 관한 대기업은 국영으로 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노동자 대우를 향상시킬 것이다.”

위의 짤막한 구절의 내용을 깊이 분석할 때, 아마도 고하가 생존해 있었다라면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거라고 생각된다. 이는 저격당하기 바로 8일 전인 1945년 12월 22일의 방송연설에서, 진정한 경제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유사한 측면이 없지도 않다고 고하가 힘주어 주장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고하의 이러한 경제관은 후일 설산이 이어받아 발전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고하의 연설이 있는 후 설산 장덕수는 세계의 조류는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경작농민에게 분배하고, 노동자에 대하여는 대규모의 사회입법을 실시하여 계급해방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글을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산업민주화와 노동자의 지위 향상문제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산은 주장했는데, 이로써 고하의 사회관과 경제관은 설산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산마저 정치

테러에 의해 희생됨으로써 고하의 전향적인 사회관과 경제관은 더 이상 진전을 볼 수 없었다.

바로 이 때문에 고하나 설산의 사회관과 경제관은 한민당의 정책이나 노선으로 정착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만일 고하와 설산이 타계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내용을 반영한 정책과 노선이 채택되었을 것이고, 그럴 경우 좌익진영 또는 중간진영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이념적인 거리도 좁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고하와 설산, 두 정치인이 타계한 후 한민당의 정책과 노선이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을 볼 때, 아마도 이들이 생존해 있었다라면 좌우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은 지양되고, 당시의 정국도 그렇게 혼란하게 전개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는 든다.

해방 후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테러에 의해 희생되었는데, 영향력 있는 정치지도자로서는 고하가 첫번째로 희생이 되었다. 혼란한 시국이라 누군가가 생명을 노릴 지도 모르므로, 언제나 신변 경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위에서 많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결과였다.

고하가 세상을 떠난지 7개월 후인 1946년 7월 19일에는 근로인민당 당수인 몽양 여운형(夢陽 呂運亨)이, 그리고 2년 뒤인 1947년 12월 2일에는 설산 장덕수(雪山 張德秀)가, 3년 반 뒤인 1949년 6월 26일에는 한독당 위원장인 백범 김구(白凡 金九)가 각각 정치테러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하의 타계는 정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해방 후 방대한 인맥을 거느리고 보수진영의 구심점으로서 정국을 수습하려고 노력했던 고하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보수진영은 일시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의 식견과 경륜, 그리고 리더십이 요청되던 시기에 그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하가 이끌었던 한민당은 고하가 다져놓은 노선을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로써 자유와 평등에 대한 고하의 정치이념, 그 중에서도 전향적인 사회관과 경제관은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온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고하의 선각자적인 면모를 높이 기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심지연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정치학 박사.

동아일보 기자, 한국정치학회 회장, 국회입법조사처장 역임.

현재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